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김형철*

이 연구는 21세기에 주요한 선거제도로 주목 받고 있는 1인 2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정치 안정성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불비례성,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유동성이라는 비교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뉴질랜드는 비례성과 정당정치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일본과 한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과 한국은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선거불비례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 안정성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양당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거유동성의 증가현상은 뉴질랜드나 일본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신생정당의 등장보다는 거대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에 의한 것으로 정당정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의 증대와 정당정치 안정성에 있어 혼합형 다수대표제보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혼합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다수대표제, 정당정치 안정성, 선거불비례성, 의회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 비교 민주주의 연구센터

1. 서론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혼합형 선거제도(mixed-member electoral systems)¹⁾로 개혁이 이루어진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변화된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하위유형인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와 혼합형 다수대표제(mixed-member majority system: MMM)의 제도적 특징이 정치개혁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들 3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한 목적이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 향상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목적과 수단적 가치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순철 2000, 21). 즉,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광범위한 참여, 그리고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는 ‘선출된 대표에 의한 통치’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과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중요성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규칙인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연구의 중요한 분석단위로서 선거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거제도는 선거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서 명시한 모든 규칙을 의미

-
- 1) 선거제도(mixed-member electoral systems)는 지역선거구를 갖는 다수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조합한 선거제도로써 21세기의 선거제도 개혁을 특징짓는 주요한 선거제도 유형이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 2)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유형인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2표 병립제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2표 혼합제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하위 유형이 갖는 특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선거제도를 국민들의 선호가 집적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규칙으로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거제도는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들 사이의 경쟁구도와 정치적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어떠한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당들 사이의 온건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서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오는가 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경쟁에 의해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어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다른 헌법과 달리 손쉽게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또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치개혁의 수단이라는 정치적 효과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서 기존 선거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선거제도로써 비례대표성의 장점과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하는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였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크게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구분되며, 그 정치적 효과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새로이 채택된 혼합형 선거제도가 투표율의 상승,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정치의 안정성이라는 개혁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장에서 혼합형 선거제도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인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에 대한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혼합형 비례대

표제와 혼합형 다수선거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변화된 선거제도가 정치개혁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선거제도 개혁 이전과 이후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혼합형 다수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혼합형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비교

선거제도는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과 정치권력의 위임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치제도로서 단기적으로는 정당체계의 분절화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안정성이라는 정치적 결과(political consequence)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Lane and Ersson 1999; Nohlen, 박병석 옮김 1994).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뒤베르제(M. Duverger 1954)가 제시한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s)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s)에 의해 정당체계의 분절화와 민주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³⁾ 먼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분절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1위대표제는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에 의해 정당의 수를 줄이는 감소효과와 제조된 절대다수(manufactured majority)에 의해 단일정당정부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정당체계에 있어 다당제와 연립정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3) 기계적 효과란 선거제도가 갖는 특징에 의한 효과이며, 심리적 효과란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기인하는 효과이다(Duverger 1954).

다음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1위대표제는 불비례성에 의해 선거과정을 왜곡하지만, 강력하고 책임 있는 단일 정당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Anderson 2001, 429). 반면 비례대표제는 소수이익의 대표, 선거경쟁에 있어 공정성 보장, 그리고 투표에 있어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세력과 반대세력의 이탈(exit)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Crepaz 1996; Kaiser et al. 2002; Tavits 2004).

선거제도의 결과인 비례성과 책임정당정치에 대한 경쟁적인 두 가지 관점은 선거제도의 선택과 개혁에 있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두 목표는 상쇄적 교환관계(trade off)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관철하기는 불가능하다(박찬욱 2000, 36-37).

그러나 최근에는 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를 결합시키기 위한 선거공학적 노력으로서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2표의 투표구조(two ballot structure)를 갖는 혼합형 선거제도는 1위대표제의 장점인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변화 경향은 20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지난 세기까지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은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적 대표성을 높이는 비례선거제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예를 들면, 1993년에서 2004년까지 선거제도가 변화된 총 28개 국가들 중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총 13개 국가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30개 국가이다. 이들 중 19개 국가가 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ynolds et al. 2005).

혼합형 선거제도가 21세기에 주목받는 이유는 첫째, 지역선거구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1위대표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투표·의석 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혼합형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독일의 경우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있어 선거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선거제도의 선택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정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적 대안이라는 점이다. 이는 1위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갖는 정치체제에 대한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최악을 피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안정책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안순철 2000). 반면에 혼합형 선거제도는 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에 있어 정당지도자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는 크게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의석할당방식에 따라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구분된다. 두 유형은 모두 1인 2표의 투표구조(ballot structure)를 갖는 선거제도이지만 의석할당방식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선거제도도 각 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선거제도 선택의 목적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 봉쇄조항, 중복후보의 가능 여부 그리고 의석배분규칙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19개 국가를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대표적으로 독일과 뉴질랜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분류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비례대표선거구가 각 주(Land)로 확정되어 있지만 뉴질랜드는 전국적 단위로 확정되어 있다. 또한 의석배분규칙은 독일의 경우 최대잔여방식인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이지만 뉴질랜드는 생-라게(Sainte-Langu)식 사용하고 있다. 의석배분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터 놀렌(1994) 참조.

〈표 1〉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19개 국가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혼합형 다수대표제(MMM)
국가	알바니아 볼리비아 독일 이탈리아 레소토 멕시코 뉴질랜드 베네주엘라	아르메니아 귀니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세르셀 태국 티모르-레스테 우크라이나

출처: A. Reynolds et al. 2005. Electoral System Design. I-IEA 재구성

먼저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정당명부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비례적 의석과 지역선거구의 1위대표제 의석이 연동되는 선거제도인 것이다(안순철 2000, 218). 즉, 각 정당의 전체 의석배분은 각 정당이 명부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선거구에서 1위대표제 방식으로 당선된 후보자의 투표는 정당의 의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의석할당방식은 결과적으로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제도 유형에 있어 비례대표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위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선거구의 대표와 정당명부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산술적인 합산방식을 통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가 지역선거구에서의 1위대표제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투표-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병렬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선거제도인 것이다(박찬욱 2000, 26). 그 결과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투표-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1위대표제보다는 높지만 비례대표제보다는 낮은 준비례대표제(semi-PR)로 분

류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선거제의 장점과 단점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 보장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다수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수제의 단점인 비비례적 성격이 다소 완화될 뿐이지 높은 비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김형철 2007, 34). 또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보궐선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보궐선거가 존재한다. 즉,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당의 의석 중 공백이 생기게 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정당명부상 다음 순서의 후보가 충원된다. 반면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석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인 경우 공백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비례대표의원이 공백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정당명부상 다음 순서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의 두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혼합형 비례대표제(MMP)	비례성 포괄성 지리적 대표성 책임성 사표의 최소화 높은 투표율	복잡성 보궐선거 존재하지 않음 의원의 두 그룹화 전략적 투표
혼합형 다수대표제(MMM)	포괄성 소수의 대표성 보장 순수비례대표제보다 적은 정당분절도 책임성 사표의 최소화	복잡성 보궐선거 존재 의원의 두 그룹화 전략적 투표 비례성을 보장할 수 없음

출처: Reynolds, A et al. 2005. Electoral System Design. I-IEA . 120

3.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

선거제도란 특정한 민주국가에서 한번이나 그 이상 계속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규칙이 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련의 선거규칙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네 가지 특성(선거방식, 선거구의 크기, 선거의 득표한계치 그리고 의회의 규모)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이 중요한 변화를 가질 때 선거제도가 개혁되었다고 할 수 있다(Lijphart 1994, 18). 이 장에서는 선거제도가 변화된 국가들 중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1994년 선거제도가 개혁되기 이전의 뉴질랜드는 1위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중도우파의 국민당(the National Party)과 중도좌파의 노동당(the Labour Party)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완전한 양당제의 국가였다. 즉, 레이프하트(A. Lijphart, 1977)가 민주적 정치체제의 유형으로 분류한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에 가장 적합한 국가였다.⁵⁾ 그러나 뉴질랜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1위대표제에 의해 발생하는 불비례성의 문제, 전통적인 정당지지패턴의 약화, 그리고 국민의 정당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되었다(강원택 2000).

첫째, 득표율과 의석을 사이의 불비례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뉴질랜드 정치지형은 1954년 이후 꾸준한 소수정당들의 등장과 유권자들의 지지율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54년 제3당으로서 사회신

5) 레이프하트(Lijphart 1977)는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영국식 모델로 다수제 모델(westminster model)과 다른 하나는 벨기에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합의제 모델(consensus model)이다.

퇴당(Social Credit)이 결성되었고 그들은 11.1%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그 후 소수정당들의 득표율은 15%이상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1993년에는 28.6%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1위대표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에 의해 의회에서 과소대표 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위대표제가 안고 있는 제도의 효과로써 소수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선거결과, 즉 득표율과 의석을 사이의 불비례성의 증가 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둘째, 1위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거대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에 대한 투표율이 8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양당에 대한 투표율이 195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거대정당에 대한 투표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 유권자의 70% 이하로 떨어졌다. 즉, 유권자들의 전통적인 정당지지가 약화되는 이탈현상(dealignments)이 과거 20-30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경제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나타난 경제개혁의 노력들이 공적 의견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다. 즉, 뉴질랜드의 정치는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975년(33%)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였으며 국민투표가 진행된 1993년에는 4%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뉴질랜드는 1984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즉, 노동당은 정권 획득과 함께 1위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를 구성하면서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1986년에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를 노동당에 제출하였으나, 노동당 정부는 이를 거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었으며, 199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선거운동의 주요한 핵심으로 나타난다. 국민당의 총리 후보인 짐 볼거(Jim Bolger)는 선거공약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후 공약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1992년 9월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두 가지의 질문내용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안적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를 묻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투표자들의 지지가 약 85%로 나왔으며, 대안적 선거제도로써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가 70.5%로 가장 높게 나왔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89). 그리고 1993년 의회에서 선거법 개혁안이 통과되었고, 이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의회선거와 함께 진행되었다. 국민투표의 내용은 기존의 1위대표제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사이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다. 1993년 실시된 국민투표의 결과, 총 82.6%의 투표참여율 중 과반수가 넘는 53.9%가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함으로써 뉴질랜드는 1인 2표의 혼합형 선거제도로 개혁되었다(Shugart and Wattenberg 2001, 92).

새로이 채택된 선거제도의 특징은 1인 2표제의 투표방식을 채택하며 정당들 간 의석 비율을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의해 할당하는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하지만 의석배분방식,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사이의 의석비율, 정당명부의 작성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뉴질랜드의 의석배분방식은 독일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수당에게 유리한

생-라그(Sainte-Langu) 방식⁶⁾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의회의 의석수가 마오리족의 특별선거구를 포함한 99석(95석+특별선거구 4석)에서 120석(115석+특별선거구 5석)으로 증가하였다. 후보자 투표에 의한 의석과 정당 투표에 의한 의석은 총 120석에서 65석과 55석이다. 후보자 투표 선출 의석 총 65석 중 60석은 일반 선거구의 후보자 투표방식을 통해 선출하고 5석은 마오리족을 위한 특별선거구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나머지 55석은 각 정당이 작성한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한다. ③ 정당명부는 독일의 경우 주별로 작성하는 것과 달리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이러한 전국적 명부의 적용은 독일식과 달리 초과의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김영태 2002, 213). ④ 소수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비례대표를 위한 의석 배정의 진입 문턱은 1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 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정당득표율이 5%이상 획득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과의석의 문제이다. 독일의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초과의석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뉴질랜드는 2002년까지의 선거에서 초과의석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5년 선거에서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는 이유는 비례선거구의 크기가 전국단위이기 때문이다(강원택 2000, 86). 즉, 초과의석은 어떤 블록 또는 권역에서의 투표율이 전체 선거구의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거나 혹은 어떤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집중화된 소수의 지지에 의해 획득할 때 발생한다(디터 놀렌 1994, 187). 이러한 상황은 특정 지역에

6) 생-라그 방식은 홀수 정수의 서수 순으로 1, 3, 5, 7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우 비례성이 강하고 대정당이나 군소정당 모두 공평한 방법으로 의석을 할당한다. 이 방식은 정당별로 득표수를 분류한 다음,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3, 5, 7 등의 분모순으로 각기 나누어서 여기서 나오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전체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의석의 배분은 이 순위에서의 최고상수에 의해 이루어진다(안순철 2000). 이러한 방식은 독일에서 보여지는 부정적 득표효과(negatives Stimmgewicht)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김영태 2002, 213).

기초한 정당이 존재하며, 비례선거구를 블록 또는 권역별로 할당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그리고 비례대표의 의석보다 지역선거구의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초과의석의 문제가 심각한 제도의 한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일본은 1994년에 단기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에서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였다. 1947년부터 1993년까지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던 일본은 파벌정치와 금권정치를 해소하고 정책, 정당중심의 선거를 실현하며,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선택하였다. 즉, 일본의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2-5석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상대다수에 의해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로서 후보중심 또는 지역중심의 선거경쟁, 과도한 정치자금의 형성과 지출, 이에 따른 정치부패의 만연, 정당불신과 정치무관심 증대 그리고 정당 중심의 정책대결의 부재 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1988년에 발생한 리쿠르트 사건으로부터 1992년 가네마루 부패 스캔들까지 금권정치의 스캔들은 1994년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1988년의 리쿠르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케시타 수상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이 나타났으나 자민당 내부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1992년 자민당의 실력자인 가네마루의 부패 스캔들은 일본 정가를 뒤흔들게 되었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하면서 자민당이 내무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호소가와 연립정부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호소가와 내각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단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산술적으로 혼합한 혼합형 다수대표제이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일부 사회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부결될 위기에 처했으나 자민당과의 협상을 통해 1석 선거구 의석을 300석, 비례의석을 200석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특징은 먼저 개혁의 목적에 있어 부패근절과 양당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파벌정치와 금권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수행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당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에 의한 합의의 정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양당제를 위해 선택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제도적 특징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특징은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이 뉴질랜드와 달리 정당들의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은 단순다수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수정당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타협적 대안으로 수용된 것이다.

일본에서 채택한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정당명부 선거와 1석 선거구 선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기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즉, 일본은 정당별 명부 득표수는 비례의석에만 적용되며, 정당의 전체 의석수는 비례명부와 1석 선거구 당선자의 수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당시 300명의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나머지 200명의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20명 줄여 18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11개의 블록별 비례선거구에서 9명에서 23명까지 선출하고 있으며, 의석배정은 동트(d'Hondt) 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 ③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석 선거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선거구 유효투표의 6분의 1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95조 1항), 비례대표의 할당을 위한 봉쇄조항은 없으나 참여에 있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정당, 직전 선거에서 2%이상 득표한 정당, 비례선거 각 지역블록정원의 20%이상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입후보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86조 2항의 정당조건). ④ 1석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하며, 각 정당은 지역 비례대표명부에만 입후보하는 후보의 수를 10명까지 공천할 수 있다. ⑤ 의석배정 과정에서 명부 상 동순위 후보들의 순위를 가려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석패율에 따른다. 석패율은 낙선후보들이 타당의 당선후보를 상대로 얼마나 선전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낙선후보의 득표수가 당선후보의 득표수에 근접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안순철 2000).

3)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배경과 특징

1987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이 이루어진 한국은 비록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민주주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임혁백 2001; 최영진 2002; 최장집 2005). 이렇듯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⁷⁾ 즉, 민주화 과정에서 채택된 1위대표제는 분단국가라는 구조적 상황에서 기

7) 노리스(P. Norris 1995, 7)는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선거제도의 선택과 개혁이 민주화의 완결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정당체계의 분절화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다 하겠다.

인하는 보수독점의 이념적 협애성과 지역정당의 지역 독점성과 결합되어 정치적 대표성의 심각한 왜곡현상과 사회적 갈등의 조정·통합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당들 사이의 선거경쟁이 이념과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는 지역적 지지에 기초한 인물중심의 경쟁양상이 심화되면서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락과 의원 개인들의 손익계산에 의해 소극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인 2표를 갖는 혼합형 다수선거제로 의 개혁을 가져온 계기는 2001년에 유권자 1인이 행사한 투표를 통해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3년 동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1인 2표제의 혼합형 다수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었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은 비례성의 확대, 지역정당체계의 극복, 그리고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있었다.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선택은 1위대표제의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에 의한 득표율과 의석율의 높은 불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그리고 지역의 배타적 지지에 기초한 지역정당정치 등을 극복하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변화된 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투표 구조	총 의석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배분방식
1988년	1인 1표	299	224 75	제1당에 1/2 우선 배분 나머지 1/2는 제1당을 비롯하여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
1992년	1인 1표	299	237 62	의석률에 따른 배분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시 우선적으로 1석 배분
1996년	1인 1표	299	253 46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5%이상 득표 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시 우선적으로 1석 배분
2000년	1인 1표	273	227 46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5%이상 득표 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시 우선적으로 1석 배분
2004년	1인 2표	299	243 56	정당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배분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3% 이상 득표 정당) 선거구 확정(표의 등가성): 10만에서 30만(1:3) 중복 입후보 금지

출처: 김용호 2001, 3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채택한 선거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① 유권자가 지역대표선거 1표와 비례대표선거 1표를 갖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에 투표한 비례대표선거의 전국득표율에 따라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방식으로 할당하게 되었다. ② 총의석수는 273석에서 299석으로 증가되었는데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에서 243석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56석으로 증가하였다. ③ 의회진입문턱(threshold)은 유효투표의 5%에서 3%로 낮아졌으며, 지역의회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때 비례대표의석이 배분된다. ④ 비례대표는 전국단위의 선거구를 통해 선출한다. ⑤ 일본과 달리,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에 중복해서 입후보를 할 수 없다.

4.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인 투표-의석 사이의 높은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혼합형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비례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갤러허(M. Gallagher 1991)의 불비례성 지수⁸⁾를 이용하고자 한다. 선거불비례성 지수는 선거제도를 통해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불비례성이 낮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즉,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소수집단과 반대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Tavits 2004; Wilensky 2002). 다음으로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락소-타게페라(M. Laakso and R. Taagepera 1979)의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⁹⁾와 페더슨(M. Pedersen 1985)의 선거유동성 지수¹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정당간 경쟁이 보장되며, 개별정당과 정당체계가 일정한 생존능력과 지속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당간 경쟁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를 측정하였으며,

8) 갤러허의 불비례성 지수는 작은 편차를 많이 나타내기보다는 얼마 안되는 큰 편차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는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Lijphart 1994). 공식은 다음과 같다. 선거불비례성(LSq) = $\sqrt{1/2\sum(V_i - S_i)^2}$

9) 락소-타게페라의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Ns)와 유효적 선거정당의 수(Nv)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효의회정당의 수(Ns) = $1/\sum S_i^2$ 유효선거정당의 수(Nv) = $1/\sum V_i^2$

10) 페더슨의 선거유동성 공식, 선거유동성(Vt) = $1/2\sum |\Delta P_i, t|$ ($0 \leq V_t \leq 100$)

개별정당과 정당체계의 지속성은 선거유동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1)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 실시된 첫 선거는 1996년 선거이다. 이후 1999년, 2002년, 2005년에 걸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소수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정당체계가 양당제에서 온건한 다당제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여 단일정당 정부를 구성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당연합을 통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6년 선거에서 국민당(33.8%)과 노동당(28.2%), 양당이 획득한 정당 득표율은 62%로 전체의석의 6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소수 정당들은 전체의석에서 39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들 사이의 득표율과 의석율은 1999년 선거와 2002년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의 선거결과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정당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년도	투표율	선거불비례성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1981	91.4	16.7	2.1	3.45
1984	93.7	14.9	2.1	16.3
1987	89.1	8.9	1.9	19.9
1990	83.2	16.1	1.7	12.8
1993	85.2	18.3	2.2	19.9
1996	88.3	4.5	3.8	18.2
1999	84.1	3.2	3.5	20
2002	77	3.7	3.8	21.5
2005	80.9	1.1	3.0	22.2

출처: 김형철 2005 재구성

먼저 투표율을 간략히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 이전의 투표율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평균 88.5%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치러진 4차례의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82.6%로 1위대표제 시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2년 선거의 경우, 1978년의 69.2%를 제외하고 1945년 이후라는 최저의 투표율인 77%를 기록하였다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New_Zealand). 그러나 2005년 선거에서 투표율은 2.1%p 상승하여 80.9%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투표율의 변화 추이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투표율의 상승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는 1위대표제 하에서 뉴질랜드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즉, 개혁이전의 뉴질랜드의 투표율은 다른 1위대표제의 국가들 보다 높았으며, 비례제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투표율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김영태 2002, 222).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정당정치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례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1위대표제에서보다 혼합형 비례대표제하에서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위대표제에서는 선거불비례성이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 14.0이었으나,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4차례 실시된 선거에서의 불비례성은 4.5, 3.2, 3.7 그리고 1.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득표-의석간의 불비례성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요구들이 왜곡됨이 없이 정치적으로 대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적인 정치적 대표성의 보장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 즉, 시민사회 내 집합적 행위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정당정치에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김형철 2006, 85; 최영진 2002, 8).

득표-의석간의 불비례성이 감소는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입문턱(threshold)을 낮춤으로써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1945년 이후 전통적으로 양당제가 지속되던 정당체계는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갖는 소수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온건한 다당제로 변화되었다. 1993년까지 2.2개이던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가 1996년 이후에는 3.8, 3.5, 3.8 그리고 3.0개의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를 갖는 다당제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의 증대는 정당정치에 있어 새로운 가치와 이슈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1위대표제 하에서 환경적 가치를 강조했던 가치당(Values)은 2.4%의 득표율을 획득하는데 그쳤지만, 선거제도 개혁이후 환경정당인 녹색당(Greens)은 1999년 이후 3번의 선거에서 5%이상의 득표율과 의석율을 획득함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가치와 이슈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은 뉴질랜드 정당정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Mair 1997).

다음으로 정당정치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선거유동성을 살펴본 결과 선거제도 개혁이후 유권자들의 선거유동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유동성의 상승이 혼합형 비례선거제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위대표제를 선택했던 1984년 선거이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참조>. 이러한 선거유동성의 지속적인 상승경향은 두 가지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1위대표제 하에서 유권자들의 노동당과 국민당에 대한 불만과 이탈,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이슈에 대한 양대 정당의 부적응성에 의해 선거유동성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실시된 이후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재정렬(realignments)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급격한 하락과 상승에 의해 선거유동성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¹⁾

이상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1위대표제 하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함으로써 단일정당정부가 구성될 수 있었다. 이 경우, 소수정당이 비록 의석을 획득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혁 이후에는 의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념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합정부의 구성은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인 노동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과 지지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증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6년 선거 결과로 제1당인 국민당은 중도정당인 뉴질랜드 제1당(New Zealand First)과 선거 후 연합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1999년과 2002년 선거 결과로 노동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렇듯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은 기존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권력의 승자독식과 ‘선거독재’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간 합의에 의한 정치와 소수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파벌정치 및 금권정치 해결,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그리고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라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인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1) 선거제도 개혁이후 국민당(National Party)의 득표율은 1996년 선거에서 33.8%를 획득하였으나 2002년 선거에서는 20.9%라는 낮은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2005년 선거에서 41.1%로 득표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선거유동성이 22.2로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뉴질랜드에서의 선거유동성은 새로운 정당의 등장과 지지효과보다는 기존 정당의 득표율의 상승과 하락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 목적의 성취에 있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표 5>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 8차례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전과 이후의 정치적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일본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년도	투표율	선거불비례성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1983	67.9	4.4	3.2	3.2
1986	64.0	7.8	2.6	5.0
1990	73.3	7.0	2.7	17.9
1993	67.0	6.4	4.1	17.8
1996	59	10.5	2.9	47.4
2000	60.6	17.6	3.0	40.0
2003	59.9	11.7	2.6	19.1
2005	67.5	15.3	2.3	11.9

출처: 김형철 2005 재구성.

먼저 투표율은 선거제도 개혁이전과 이후에 있어 8%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에서의 투표율은 1980년 이후 평균 69.4%였으나, 혼합형 다수대표제하에서 실시된 4번의 선거에서는 약 61.8%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 원인은 선거구의 변화에 따른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저하, 복잡해진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이해, 그리고 기존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의 지속에서 찾을 수 있다(김영태 2002, 224; 고선규 2002). 그러나 2005년 선거에서 투표율은 67.5%로 선거제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투표율의 상승현상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적응과 정치제도로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단기비이양식 하에서는 8.0 미만의 선거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혼합식 다수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거불비례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선거불비례성의 상승은 첫째, 1위대표제에 의한 지역대표의 선출과 블록별 비례대표의 선출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당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1위대표제는 단기비이양식 하에서 낮았던 선거불비례성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도 전국이 아닌 지역적 블록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함으로써 투표와 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높게 되었다(양기호 2000, 101-102). 둘째, 거대정당의 경우에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어 비례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소수정당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함으로써 비례선거에서 낮은 득표율을 획득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²⁾ 이러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지역구 후보자의 수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의 사표비율을 낮추고 소수정당의 사표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선거불비례성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집권당과 제1야당의 의석비율의 합은 선거제도 개혁이전인 1993년 선거에서 52.0%였던 반면, 개혁 이후인 1996년 선거에서 79.0%, 2000년 75%, 2003년 86.3% 그리고 2005년 9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라는 정치적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선규 2006, 33).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소수 의사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2) 예를 들면, 1996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소선거구 후보를 내지 않았던 신진당은 소선거구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28.6%,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18.9%의 비례대표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양기호 2000, 103).

다음으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정당정치에 미친 영향을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와 선거유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한 목적은 다당제적 경쟁구도를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적 경쟁구도로 변화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새로운 선거제도인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표 5>를 보면, 의회정당의 효과적 수는 선거제도 개혁이후 서서히 줄어들어 2005년 선거에서는 2.3개의 정당이 의회내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의회내 정당의 효과적 수가 감소한 요인은 거대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의석 증가와 소수정당의 의석비율의 감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선규 2006, 30-31). 즉, 새로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높아지면서 정당경쟁구도는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이 어려워지고, 거대정당 사이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정당정치에 안정성의 또 다른 지표인 선거유동성을 살펴보면, 선거제도 개혁 이후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유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기존 정당의 분열과 새로운 정당의 등장에 의한 것이다. 즉, 1988년과 1992년의 잇따른 부패스캔들, 1955년 이후 38년간 집권정당이었던 자민당 내의 파벌간 주도권 다툼, 그리고 정치개혁의 추진과와 반대파 간의 대립은 자민당의 분열을 가져왔다(이이범 2007, 59). 이러한 자민당의 분열은 자민당으로부터 탈당한 파벌을 중심으로 다수의 새로운 정당들이 창당되었다. 그리고 1993년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의 후보들 다수가 의회에 진입하면서 정당들 사이의 연합과 분열 등 광범위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선거제도로 실시된 1996년과 2000년 선거에서의 선거유동성은 47.4%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 사이의 이합집산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2003년 선거에서는 19.1%, 2005년 선거에서는 11.9%로 선거유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유동성의 감소는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정

당과 유권자들의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정당정치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인 정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은 2005년 선거 이전까지 후원조직에 의존한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졌었다(고선규 2002, 63). 그러나 2005년 선거에서는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우정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는 정당의 정책보다는 정당리더의 인기수준과 이미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 중 하나인 정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은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이범 2007, 77).

3)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변화된 선거제도, 즉 혼합형 다수대표제에 의해 실시된 17대 총선 결과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선거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선거였다. 즉, 17대 총선은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내세운 집권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승리,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뿐만 아니라 제3당으로의 급부상, 민주화 이후 지역 독점적 경쟁구도를 이끌어왔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그리고 집권당이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는 단점정부가 형성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정치지형의 변화, 즉 지역균열에 기초한 정당경쟁이 정책과 이념 등에 의한 경쟁구도로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의 불안정을 가져왔던 빈번한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교착상태가 단점정부의 형성에 의해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17대 총선결과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년도	투표율	선거불비례성	의회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1988	75.7	6.7	3.5	28.2
1992	71.9	10.3	2.7	16.5
1996	63.9	10.6	3.1	30.5
2000	57.2	10.5	2.4	8.8
2004	60.6	9.6	2.4	38.8

출처: 김형철 2005 재구성.

먼저 2004년 총선의 투표율은 2000년의 총선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율의 상승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기대효과, 즉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호의 왜곡현상이 낮아졌다는 기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승률이 3.4%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혼합형 다수대표제도의 개혁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인 선거불비례성의 완화에 대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새로운 선거제도의 선거불비례성은 유사한 선거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낮다. 그러나 개혁이전의 선거제도와 비교하면, 1992년 선거 이후 선거불비례성이 10 이상이었던 것이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는 9.6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선거불비례성의 감소 값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선거불비례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낮은 변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불비례성에 대한 평가는 주요정당의 보너스율에서 잘 나타난다. 즉,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득표한 비율보다 11.2% 높은 의석율을 차지하였으며, 한나라당도 득표율보다 3.3%가 높은

의석율을 획득하였다. 반면에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3.5%)과 민주당(-5.8%)은 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의 지역구 투표에서의 보너스율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례대표의 보너스율은 정당들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원택 2005; 김왕식 2006; 정준표·정영재 2005). 그러나 지역투표와 정당투표가 결합된 전체적인 정당들 사이의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으로써 선거불비례성의 완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강원택 2005, 70).

〈표 7〉 17대 총선에서 주요정당의 보너스율

	지역구 의석(243)				비례대표 의석(56)			
	지역득표	의석율	보너스율	이득비	비례득표	의석율	보너스율	이득비
열리우리당	41.9	53.1	11.2	1.27	38.3	41.1	2.8	1.07
한나라당	37.9	41.2	3.3	1.09	35.8	37.5	1.7	1.05
민주노동당	4.3	0.8	-3.5	0.19	13.0	14.3	1.3	1.1
새천년민주당	7.9	2.1	-5.8	0.27	7.1	7.1	0	1

출처: 김왕식 2006, 172

이렇듯 전체적인 수준에서 혼합형 다수대표제가 선거불비례성을 줄이지 못한 이유는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대표 의석 간 비율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비례대표 의석은 56석으로 243석의 1/4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위대표제의 불비례성에 대한 비례대표제의 보정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표-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정치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는 지역정당의 효과에 의해 다당제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2000년 선거

부터는 지역정당체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는 2.4로 낮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실시된 2004년 선거에서도 2.4개의 정당이 의회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 사이의 경쟁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정치를 특징짓는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경쟁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17대 총선에서 각 당이 지역에서 획득한 득표율을 비교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의 지역별 득표 분포는 이전의 선거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에서 비교적 고른 득표율을 기록한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호남에서의 강한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지역에 기초한 정당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렇듯 정당정치와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선거유동성의 경우, 민주화 이후 3번의 선거에서 평균 25.1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선거에서는 8.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2004년 총선에서는 다시금 선거유동성이 38.8로 높아졌다. 이는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 득표율의 급격한 상승과 민주당 및 자민련 득표율의 급락에 따른 것이다. 즉,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높은 선거유동성은 선거제도의 효과에 의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신생정당의 등장과 소수정당의 선전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기존 정치인들의 출세기에 의한 분당과 이합집산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 후 나타났던 선거유동성 증가와 다른 의미를

13)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25%대의 지역구 득표율을 받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30%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와 정당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총선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갖는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와 일본은 선거제도 개혁 후 의회내 유효정당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선거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의회내 유효정당 수가 유지된 채 선거유동성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회내 유효정당의 수와 선거유동성의 불비례적 관계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로서의 정당경쟁구도의 재편을 의미하기 보다는 빈번한 분당과 이합집산에 따른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정당체제의 극복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2004년 총선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17대 총선은 전국적 차원에서 고른 득표를 획득한 정당(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출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정당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과의 득표율의 차이를 예전보다 줄였지만 호남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듯 영남에서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득표율 증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슈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출신지역의 효과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벽을 허물지 못하였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독점성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를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전 총선과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총선에서 주요지역정당의 특정 지역에서의 득표율 변화(%)

역대선거	지역정당	전국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13대-16 대 평균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42.5	55.5(80.5)*	15.8	35.5
	민주당/ 국민회의	27.4	7.0	69.5(93.9)	16.1
	자민련	10.9	11.5	1.3	40.3(73.4)
17대 지역득표	한나라당	37.9	50.7(84.0)	0.4	23.6
	열린우리당 + 민주당**	50.0	31.6	86.3(100)	47.7
	자민련	2.7	0.6	0.4	21.7(16.7)
17대 정당득표	한나라당	35.8	50.0	2.7	25.2
	열린우리당 + 민주당**	45.4	30.6	81.4	44.9
	자민련	2.8	0.7	0.8	14.9

* ()는 지지 지역에서의 의석율을 의미.

** 17대 총선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산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혼합형 다수선거제로 실시한 17대 총선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정당의 독점적 대표성이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완화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정당 간 득표율의 차이는 자민련을 제외하고 줄어들었지만 각 지지역에서의 정당들 사이의 득표율과 의석율의 차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는 각 국가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의 차이와 선거제도의 제도적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의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새로운 선거제도인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위대표제에서 발생되었던 득표-의석간 불비례성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이익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정당정치가 있어 온건한 다당제의 제도화를 가져옴으로써 단일정당에 의한 승자독식의 정당정치가 정당간 협력과 타협을 필요로 하는 합의의 정당정치로 변화되었다. 즉, 소수의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에 기초한 정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정당정치에 있어 양당제로의 변화와 선거유동성의 안정화 경향을 가져왔으나, 선거불비례성의 증가와 인물중심의 선거경쟁이라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이 채택한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민의 또는 소수의견의 정치적 반영에 있어 새로운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중심의 경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권력교체가 가능한 양당제에 대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효과는 2005년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결과를 통해 그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한 번의 선거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개혁된 혼합형 다수선거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대표에서 나타나는 선거불비례성을 전제적으로 낮추는 조정의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빈번한 이합집산에 의해 선거유동성이 높아짐으로써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정당의 배타적인 경쟁성과 독점된 대표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3개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이 낮으며,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중심의 선거 경쟁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역의석 수와 비례의석 수의 커다란 차이가 1위대표제의 지역화 경향에 의한 지역정당체계의 지속을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수를 늘리고 비례성이 높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즉,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비비례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태 2002, 245). 그리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념과 정책보다는 인물 또는 지역 등의 연고중심의 정당정치를 만들어내는 혼합형 다수선거제를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 비례선거제로의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수가 할당됨으로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의 이념, 정책 그리고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지지에 기초한 경쟁구도를 가져올 것이며, 정책경쟁이 자연스럽게 정당 간 경쟁의 균열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개혁 과정에 있어 선거 개혁의 논의가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논의되는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 속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며, 그 결과 투표율과 같은 정치참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0.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71-90.
- 강원택.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고선규. 2006.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5(1).
- 고선규. 2001.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일본연구논총』. 13.
- 김영태. 2002.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7-249.
- 김왕식. 2006. “1인 2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서울: 오름. 155-184.
- 김용호.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 김형철. 2007. “한국 정당정치와 최근의 선거결과.” 이정희 외.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7- 48.
- 김형철. 2006.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신뢰연구』. 16.
- 김형철. 2005.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 모형의 탐색.”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디터 놀렌. 박병석 역. 1994.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서울: 다다.
- 박찬욱. 2000.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 아렌트 레이파아트. 서주실 역. 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1945-1990)』. 삼지울.
- 안순철. 2000. 『선거체제비교』. 서울: 법문사.
- 양기호. 2000. “일본.” 박찬욱 편. 『비례대표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93-112.
- 이이범. 2007. “일본의 정당과 선거.” 이정희 외.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정치적

- 선택의 메커니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혁백. 2001.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정준표 · 정영재. 2005.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4(2). 5-44.
- 최영진. 2002. “한국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전략』. 8(2). 5-28.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Anderson, Liam. 2001. “The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 Design for Macroeconomic Performa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4).
- Crepaz, Markus M. L. 1996. “Consensus versus Majoritarian Democracy: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dustrial Disput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1).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Modern State*. New York: Wiley; 장을병 역. 1982. 『정당론』. 서울: 사상문고.
- Gallagher, M. 1991. “Proportionality, Disproportionality and Electoral Systems.” *Electoral Studies*. 10.
- Kaiser, A. et al. 2002. “The Democratic Quality of Institutional Regimes: a Conceptual Framework.” *Political Studies*. 50.
- Laakso, M. and R. Taagepera. 1979.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s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
- Lane, Jan-Erik and S. Ersson. 1999.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London, Thousand Oaks, and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Lijphart, A. 1994.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1945-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주실 역. 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1945-1990)』. 서울: 삼화원.
- Lijphart, A. 1977.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Mair, Peter. 1997. *Party System Change*. Oxford: Clarendon Press.
- Pedersen, M. N. 1985. “Changing Patterns of Electoral Volatility in European Party

- Systems, 1948-1977.” in Daalder, H. and P. Mair(eds.).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Reynolds, A. et al. 2005. *Electoral System Design: The New International IDEA Handbook*. Stockhol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Shugart, M. S. and M. P. Wattenberg. 2001.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agepera, R. and M. S. Shugart. 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 Tavits, M. 2004. “The Size of Government in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3).
- Wilensky, H. L. 2002. *Rich Democracies: Political Economy, Public Policy, and Perform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New_Zealand